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해석

Interpretation of Terrorism Threats in Soft-Target for Public Safety

오 한 길*·이 명 진**

Hangil Oh · Myoungjin Lee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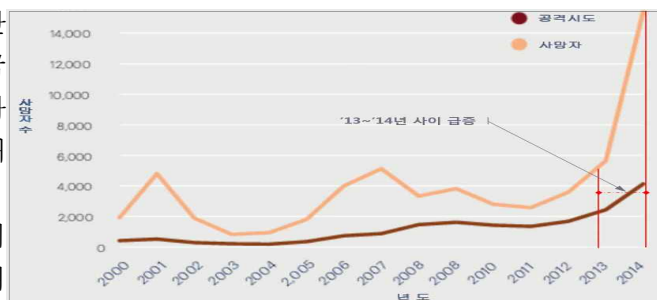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의미를 고찰하여 비교해석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법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이격을 줄이기 위해 진행 되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공포감을 극대화를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증가와 북한에 테러위협, 국내에 발생가능 자생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국외의 테러관련 법을 고찰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행위, 범죄행위, 사고행위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처별 고유업무에 혼선을 줄이는 해석 방법을 제공하였고, 테러리즘 정의의 법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향을 제언함으로써 사후 국가위기상황 재난관리에 대한 대테러 전략 구축 및 개선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서 론

2001년 9월 11일 국제무역센터 테러이후 불특정 다수의 공포심 유발을 위해 ‘소프트 타깃’(Soft-target)에 테러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 1>의 『Vision of Humanity』 “2015 국제테러지수 보고서(Global Terrorism Index 2015)”에 따르면 2000년도에서 2014년도 까지 15년간 테러공격이 증가하였고,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사망자 증가요인을 밝히기 위해 테러대상에 따른 사상자 수를 비교한 결과 테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사망자수가 172% 증가 하였음을 <표 1>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최근 테러의 경향은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국내에도 테러예방 및 대비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국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를 ‘테러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테러행위를 보는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소관부처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1 '00 ~ '14년도 까지 년도별 공격대비 사망자수>

출처: Vision of Humanity. Global terrorism index Report, 2015

테러대상	2013	2014	차이	비교(%)
민간&시설 ²⁾	5,647	15,380	9,734	172%
기 타	1,921	3,496	1,576	82%
군 인	1,439	2,530	1,091	76%
사업체	4,536	6,124	1,589	24%
정 부	1,715	2,060	345	20%
종 교	1,250	1,111	-139	-11%

<표 1 '13~'14년도 사상자의 분류>

* 출처: Vision of Humanity. Global terrorism index Report, 2014

전쟁 중인 국내 상황에서 테러의 행위는 국가안보(적의 도발 및 침투)의 『통합방위법』 또는 공공의 안전으로 보는 시각의 『테러방지법³⁾』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여 행위에 대한 해석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담당부처 대응에 대한 혼선 또한 발생하여 국내 테러발생 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폐지되고 『테러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의 테러에 대한 구조활동 및 수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었던 제3조(기본지침)6의 내용이 삭제되면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법적근거로 대응하던 행정안전부, 소방청의 재난관리 부처의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를 근거로 한 재난관리담당 기관들은 테러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테러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혼선을 막고 국민보호를 위한 대테러대비 전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테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고도의 군사적 긴장상황 속에서 전쟁에 대한 행위와 테러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테러행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테러사건으로 수사의 기능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테러를 국가위기상황을 유발하는 사고로서 재난관리의 영역으로 넓혀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적인 연계적 사고를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의 경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집중하는 것과 더불어 테러행위를 바라보는 이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해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테러리즘의 해석은 국내환경에 맞는 대테러전략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국내 다중이용시설 보안실태 진단 및 분석』 과제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2) 불특정 다수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Private citizens & property)
3)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약칭